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049호 1판 (음력 6월 21일) 2015년 8월 5일 수요일

우암학원 창학6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무더위 가르는 시원한 물줄기

4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 연일 불볕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광 불갑저수지에서 수상스키 동호인이 물살을 가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날 구례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5.6도를 기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도시재생 공모사업 줄줄이 탈락

정부 내년예산 8000억…신청 7개 중 1개만 포함

전담 인력·조직 절대 부족…구도심 활성화 난항

광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준비 부족과 의지 결여로 광주역을 비롯한 구도심의 공동화 해소 기회를 놓치는 등 표류하고 있다.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할 인력이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데다 사업 추진에 대한 절박감이 없는 탓에 정부가 공모한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예산확보) 경쟁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도시재생은 해당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도시를 되살려내는 프로그램으로, 국가적으로는 물론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초창기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상대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문화중심도시라는 도시의 특수성을 감안, 지역의 향토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주민의 생활공간과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은 필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거주자 중심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자치단체들의 도시재생 전담조직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지원·독려하고 있다. 기존 토지건물 소유자 중심의 도시정비 사업이 지역공동체 붕괴, 원주민 축출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인력 확충 등을 비롯한 재생의지가 강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생 사업(예산)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정부 공모 도시재생 사업 지원 예산만 총 75개 사업 778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도시재생 업무 인력을 지난해 대비 대폭 보강하는 등 도시재생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다.

광주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은 기존 27명에서 37명으로 10명을 늘렸으며, 인천도 33명에서 49명으로 인력을 확충했다. 특히 서울은 기존 104명에서 162명으로 도시재생 인력을 확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6%의 인력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광주시의 도시재생과 전체 인력은 14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도시재생 인력은 6명뿐이다. 나머지는 8명은 도시정비 업무를 맡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달 23일 조직정비를 통해 부족한 도시재생 인력 보강에 나섰지만 5급 2명, 6급 이하 2명 등 겨우 4명을 충원하는데 그쳤다.

이들 인력으로는 기존 업무인 도시개발 업무 등을 감당하기에도 빠듯해, 도시재생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 정작 시급한 업무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 조직관리 담당자는 "도시재생 업무 보강을 위해 4명을 추가 배치하고 도시재생과 아래 1개 계를 더 늘렸다"면서 "시의회 등에서 도시재생추진단 신설 등도 제안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역 인근 재생사업 등 광주시의 주요 도심 개발 사업들이 정부 주도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서 줄줄이 탈락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16년 정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역 주변 도심재생(100억원) 프로젝트가 사실상 탈락했으며,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신청한 6개 사업 중 남구 공동체 마을 조성을 제외한 옛 전남도청 분수대 하부 시민광장 조성사업 등 나머지 5개 사업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도시재생 업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광주역 주변 도심재생 프로젝트만을 예로 들어도 관할 구청인 북구청의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고, 광주시의 의지도 매우 약한 듯하다"면서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논리적 필요성과 타당성, (자치단체의)추진의지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8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광복 70주년 국민사기 진작…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광복절이 토요일인 만큼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연휴가 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진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에는 국민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또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56차례에 걸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첫 번째 임시공휴일은 1962년 4월19일이었다. 당시 박정희 군사정부가 5·16 군사 쿠데타 이듬해인 1962년 4·19혁명 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군사정부는 같은 해 5월16일을 '5·16혁명 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12월17일을 헌법개정 국민투표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임 복지부장관 정진엽 교수 내정

고용복지 수석 김현숙 의원

朴대통령 내일 대국민담화

정진엽 내정자

김현숙 수석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인사를 전격 단행, 신임 장관에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내정했다. 또 신임 고용복지 수석에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프로필 2면〉

문형표 보건복지장관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동시에 물러나게 하고 새 인물을 기용한 것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됨에 따라 사태 수습을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문책성 교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정부 보건복지 라인만 바꾸는 '원 포인트' 인적교체를 마무리하고, 황교안 총리 체제의 내각을 연말까지 유지함으로써 집권 후반기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장관·수석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정 내정자는 25년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의료 경험을 통해 한국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고 있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밝혔다.

또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오는 6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후반기 국정 운영 구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정은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부회장이 이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새누리당 김현숙 전 의원의 후임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